찬성 "포기땐 국비 1조 2천억 반납"…반대 "적자 연 700억 부담"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주장 쟁점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호선에 이은 2호선의 적자 가중'으로 '광주시 재정이 더 열 약해진다'는 것이다. 광주 동서를 가르며, 공공거점 시설, 다중이용시설 없이 운행하는 도시철도 1호선의 누적 적자 경험, 광주시의 공공(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다.

광주시는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 공거점시설, 외곽 택지지구 등 광주 전역을 통과하 는 도시철도 2호선이 1호선과 시내버스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면서 적자를 최소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 재정 여건에서 2호선 건설 과 재정 적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부 근거가 미약한 부분까지 시민들에게 전해져 왜곡되고 있다 는 목소리도 높다.

◇"시 재정 열악"VS"재정 건전 무리 없어"=건설 반대론자들은 오는 2024년까지 2조579억원을 투 입해야 하는 2호선으로 인해 광주시의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복지, 교육 등에 쓰여야 할 예산마저 도시철도 건설비로 들어 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계획된 2호선 건설 예산을 들여 다보면 전체 사업비의 60%인 1조2347억원이 국 비, 즉 국토교통부의 예산이다. 나머지 8232억원 (40%, 지방채 2058억원 포함)은 시의 부담이다. 국비는 전용이 불가능하며, 2호선을 포기하면 곧바로 반납해야 한다.

광주시는 2호선 건설비가 이미 정부의 재정중기계 획에 반영돼 있으며, 광주시의 재정 상황도 지난해 행정자치부 재정분석에서 '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가 늠하는 핵심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21%로 특·광역시중 광주시가 가장 높다. 서울이 서울 -6.6, 대구 -6.89, 인천 -4.7, 대전, -6.41, 울산 -6.4 등이다. 광주에서 그동안 대규모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교육·복

모든 지자체 교통시설 국비 쟁탈전 2호선 없으면 버스 증차 불가피

2~3개 차량 기관사 없이 운행 대량수송 본연의 기능 수행 못해

지·일자리분야는 위축되지 않고 전국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특히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국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서 어렵게 확보한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적자 700억원 이상"VS"교통복지, 대체 수단 없어"=일부 시민단체와 광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현재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부 시민단체 측은 1호선과 2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 767억원을, 광주시는 738억원을 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적자 증가를 이유로 2호선을 반대하고 있으며, 시는 '교통 복지',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호선이 없다면 도심 외곽 등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체하기위해 버스 430대 증차가 불가피, 연간 28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로 승용차 이용 자제, 노인·학생등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고, 구간별 요금제 도입 등 세부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등이 지단이다

◇ "예산 적은 BRT 도입"VS "시 재정 부담 더 커" = 일부 시민단체는 땅을 낮게 파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저심도 지하철 대신 BRT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System)를 도입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교통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BRT가 도로 중앙 2~3개 차선에 시내버스만 다니게 하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현재 2호선 노선 41.9km에 BR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설 및 도로 설치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결국 시의 부담은 비슷하다는 논리다.

시가 추정한 BRT 설치 비용은 1조 4229억원에 달한다. BRT 시설 설치에 5721억원, 도로 개선에 8508억원이 쓰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도로 개선 비는 전액, 그리고 BRT 시설설치비의 절반이 시의 부담이다. 여기에 시내버스의 수도 늘려야 하고, 교통 지정체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달랑 2량 불과"VS"1일 43만명 수송, 인천 등도 2량"=2호선은 2~3개의 차량을 기관사 없이 무인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는 '대량 수송'이라는 도시철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배차 간격 조정(4분에서 2분), 차량 증차(2량에서 3량) 등으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하루 43만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이는 버스 1024대의 수송효과라고 강조한다. 인천2호선 역시 2량으로, 배차 간격을 3분 20초에서 3분으로 조정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시이 서면이다.

무인 운행과 관련해서는 개통 전 6개월 이상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비상 및 재난상황에 대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산 4호선, 대구 3호선, 인천 2호선 등 무인운전으로 개통한 경전철의 경험과 노하우도 배우겠다"고 밝혔다.

◇"수요예측 잘못"VS"통계청 추정 인구 적용"=일 부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미래 인구를 과다계상해 2 호선 건설 근거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모임측은 2027년 기준 130만명 수준으로 인구가 급 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시는 통계청이 광주 인구를 2027년 148만 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2020년과 2021년 광주 인구를 145만명에서 153만명으로 예측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주 시민에 둘러싸인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한글날인 9일 오후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유적지를 방문, 세종 영릉을 둘러본 뒤 나서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

靑 "남북정상회담서 초청 의사"…문대통령 7박 9일 유럽 순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문 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반도 평화 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 교황님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교황님 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적극 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 \sim 18$ 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이런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 백두산 천지 주변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김 대주교가 "김 위원장 은 스위스에서 유학도 오래 했으니 관광의 중요성 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북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 니 스위스에서의 경험을 살려 관광사업을 하면 번 창할 것"이라고 하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주교는 이어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황청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허리를 숙이면서 "꼭 좀 전달해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유럽 순방을 나선다.문 대통령은 13~18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국빈 또는 공식방문, 두 나라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는 외교·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이탈리아와 신산업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어 $17 \sim 18$ 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축복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8 \sim 19$ 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해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임동욱기자 tuim@

이낙연 총리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재개" 한글날 경축식 축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2005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함께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시작했으나 남북관계의 기복으로 멈췄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는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을 이어가려 한다"고 밝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 한글과 땅을 주셨을 때는 우리 겨레가 하나였다. 그러나 세계냉전은 겨레와 땅을 두 동강 냈다"며 "조국분단 70년은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남과 북에서 달라지게 바꾸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

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상에 약 3000개 민족이 7000개의 말을 쓰지만 글자는 40개뿐이고, 우리처럼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의 글을 모두 가진 민족이 많지 않으며, 누가·언제·왜·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확실한 것은 한 글이 거의 유일하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미 한글은 우리만의 글이 아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57개 나라, 174곳으로 늘었다"며 "세계의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함께 부른다. 정부는 자랑

스러운 방탄소년단께 문화훈장을 드리기로 어제 국 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민정신으로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들의 어진 마음과 깊은 고민을 다시 한 번 새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성을 아끼고 백성의 편안한 삶을 살피던 성군 세종대왕 의 위업을 본받아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최우선으 로 여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